

사상적 혼돈의 시대에 부활하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자본주의 분석이론 여전히 유효해

장상환 |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오늘날 사회와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역사적 유물론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본주의 분석이론은 제국적 자본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을 설명해준다. 반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아무런 매개 없이 정치적 실천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오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아셈 2000 서울행동의 날' 집회 광경.

최근 출판계에서 다시 마르크스주의 관련 저작물이 여럿 출간되고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동유럽의 현존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후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했던 상황과는 크게 비교된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황을 해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계급간 갈등과 노동자계급 해방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가 다시 요구되기 때문이 아닐까.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 사상적 혼돈의 시대에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사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유물론, 자본주의 분석이론, 사회주의 혁명이론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 가운데 역사적 유물론과 자본주의 분석이론은 현재의 자본주의사회와 경제체제에도 여전히 유효한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이론, 즉 혁명이론은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당대의 조건에 크게 규정돼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크게 수정돼야 할 것이다.

객관적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론

우선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살펴보자. 이는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사유와 존재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우리의 인식이 진리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이다. 마르크스는 인간 인식의 올바른은 실천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고 믿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을 포함해 모든 이론의 진리성은 실천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천 속에서 인간은 진리, 즉 그의 사유의 현실성과 힘의 차안성(此岸性, 이 세계

적인 것을 의미, 저 세계 즉 피안성에 대립되는 개념)을 증명해야 한다. 실천으로부터 고립되어 사유의 현실성이나 비현실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순전히 스콜라주의적 문제이다"(마르크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 박종철출판사, 185쪽).

마르크스는 사변철학에서 결별하고 자신의 작업을 실증적인 과학이라 불렀다. 마르크스는 모든 전제들을 버리고 오직 현실 자체에서 출발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은 노동하는 존재고 노동은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변동해온 사회관계의 총체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은 그들 생활의 물질적·사회적 조건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다.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위의 책, 202쪽).

마르크스는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이 아니라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현실적 투쟁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마르크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위의 책, 189쪽).

마르크스는 사회가 대립물의 통일이며, 그 속에서 계급투쟁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계급을 매개로 표현되며, 역사발전은 적대적인 계급간의 투쟁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대해 변증법적으로 이해하면 현존하는 상태에서 변동의 가능성을 찾

을 수 있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변동을 야기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을 혁명의 객체,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식했다.

인간 삶의 근거인 사회에 대해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에 비해 엥겔스는 존재(물질)가 의식에 대해 능동적이고 의식은 존재의 수동적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을 자연과학에 접근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는 “세계가 물질로 구성돼 있다”고 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가 인간보다 물질을 중요시한다고 악선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탈린주의의 경제결정론, 즉 생산력이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회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론은 물질주의적 오류를 범했다.

객관적 현실을 중시하는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을 수용하면 주관적 관념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오늘날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훨씬 복잡하게 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유효한 실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본론》의 ‘공황론’은 디지털 혁명에도 들어맞아

그 다음, 마르크스의 《자본론(전5권)》(김수행, 비봉출판사)은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인 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에서 핵심은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간의 경쟁을 동력으로 생산력을 급격히 발전하게 했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계급과 자본의 대립이 격화되고, 공황과 실업증가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공황은 노동자계급의 삶을 파괴시켜 그들의 혁명운동을 야기하는 객관적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흔히 지적하는 것과 같은 ‘공황에 의한 자본주의 자동붕괴론’을 결코 주장한 적이 없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려는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자본주의 모순의 발현 정도가 변화될 수는 있으나 모순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은 거시경제적 경기순환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1980년대에 전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실천으로 경제불안정, 빈익빈 부익부, 선진 제국주의 국가와 신식민지 후진국간의 격차 확대 등 자본주의적 모순은 더욱 심화됐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해가 여전히 타당함을 입증해주는 현실적 사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경제에서 이른바 정보혁명에 의한 신경제의 효과로 가치론과 공황론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2000년 3/4분기부터 시작된 공황은 이런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했다.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은 유통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본의 회전속도를 빠르게 해 이윤율 저하경향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디지털 혁명은 공황을 상당 기간 연기시켰으나 불균형을 누적시켜 공황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또한 최근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 각국 경제가 점차

통합돼갔지만 세계화는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적 지배를 확장해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세계화는 미국을 제외한 국민국가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미국의 초과이윤 흡수를 보장했고, 미국의 10년 장기 호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통신 부문 과잉투자의 귀결로 IT관련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붕괴되자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동아시아의 수요 위축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시켰다.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대한 고집 버려야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은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생산력 발전과 계급분화를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할 계급을 만들어 사회주의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는 개명된 지도자들이 국가의 통제권을 쥐고, 그것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을 수행하는 활동의 결과로 사회주의가 이뤄진다고 봤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은 그 당시의 시대적 조건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실현되지 못했고, 부르주아 독재가 말 그대로 관철됐다. 국가 내지 정부는 그야말로 자본가계급 독재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마르크스가 정부를 부르주아계급의 한 위원회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레닌주의의 전위당에 의한 무장봉기 전략은 20세기 초반 러시아의 시대적 조건에 근거를 둔 전략이었다. 대중들은 대부분 문맹이었으며, 정보매체가 별로 발달돼 있지 않았다. 소수의 전위적 지도자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합법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합법 정당을 조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의회가 존재하지 않아 대중봉기를 통해 구체제를 전복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다.

이런 마르크스의 혁명이론, 레닌의 혁명이론을 아무런 매개 없이 한국사회의 정치적 실천에 적용하려는 실천은 오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보장돼 있고 보통교육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들의 지적 수준도 크게 높아져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합법적인 대중정당이 의회를 통해 집권을 시도하고 이를 쟁취한 합법적 권력에 대해 우익 자본가세력이 쿠데타 등으로 도전해올 경우 민주투쟁으로 이를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

장상환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정보정당을 말한다》 《한국의 사회운동》 등이 있다.